

所得分配의 最近動向

李 俊 求

우리 사회의 分配狀態가 최근에 이르러 상당히 好轉되어가고 있다는 주장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實證的 資料에 큰 신뢰를 두기 어렵다. 통상의 不平等度指數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分配상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며, 分配的 正義의 관점에서 볼 때에야 비로소 문제의 核心에 가까이 갈 수 있다. 本論文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1980年代 後半 이래의 최근동향을 평가해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 몇 가지의 미미한 改善이 있었지만 不平等의 基本構造는 그대로 온존되고 있다는 것이 분석의 결과이다. 또한 不動產投機에 의한 不勞所得이 새로운 불평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過消費나 勤勞意慾 감퇴현상이 궁극적으로는 불평등한 분배와 끈이 닿아 있음도 함께 분석되고 있다.

1. 머 리 말

分配를 둘러싼 葛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최소한 成長의 측면에서만은 별 문제가 없었을 때와 달리 成長에 대해서조차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이 때, 分配의 문제는 지난날보다 한층 더 복잡한 양상을 띠 수 밖에 없다. 종전에는 成長爲主의 정책이 분배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만은 별반 이의가 없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成長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分配에 대해서도 마땅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當爲性에 대해서도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分配의 平等化를 위한 노력이 바로 우리 경제를 瀕死狀態에 몰아 넣은 원인이었다는 주장까지 듣고 있으며, 分配에 대한 그나마의 관심은 다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눈 앞에 두게 되었다. 비록 입으로나마 公정한 分配를 외치던 사람들조차 지금은 보다 시급한 다른 과제에 눈돌릴 때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사실에 있어 分配의 상태를 바로 잡아보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 변변히 취해지지도 못했던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分配問題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힘줄이라는 인식이 비교적 널리 퍼져 있었지만, 어떤 획기적인 처방도 마련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낭비한 결과 오늘의 難局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既得權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改革에 유형무형의 방해를 꾀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

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는 끝내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이리저리 눈치보기에 급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가 결과적으로 既得權階層의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필자는 拙著[李俊求(1989)]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不平等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명해보려고 시도한 바 있다. 특히 여러 가지 不平等度指數에 반영된 그 동안의 分配上變化는 그다지 현저한 변화라고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의 不滿은 그렇게 높은 水位에까지 오르게 되었는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본질은 分配的正義의 차원에서만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으며, 단순히 어떤 階層이 얼마 만큼의 몫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으로서 그 본질이 제대로 잡혀질 수 없다는 것이 그 글의 결론이었다. 국민들은 누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보다는 누가 어떻게 해서 많은 富를 축적하게 되었는가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도 지적했다.⁽¹⁾

分配現實에 대한 이와 같은 파악은 당연히 필자로 하여금 현재 우리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배문제 관련연구의 基本方向에 대해 어느 정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도록 만들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분배의 상황을 量的인 則面에서 파악하고자 하고 있어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質的인 측면은 관심의 死角地帶가 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연구가 우리 사회에 팽배한 불만의 원인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1970년대에서 80년대로 오면서 分配狀態는 점차 惡化一路를 걸어왔지만 그 어떤 불평등도 지수에서도 그와 같은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이 좋은 예가 된다.

현 시점의 경제이론에서 필자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質的評價를 가능하게 하는 理論的道具를 찾아내는 일이 쉬지는 않다. 양적인 평가에만 익숙해져 있는 主流經濟學者에게 낮은 세계를 비리고 질적 평가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류경제학의 방법론에 충실하면서 우리의 分配現實을 설득력있게 파헤칠 수 있음이 보여진 바가 결코 없었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방법론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사실에 가까운 統計資料만 얻을 수 있으면 설득력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分配에 관련된 통계는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부정확하기 짝이 없어 그와 같이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를 얻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차지하고라도, 필자가 보는 바의 우리 사회의 不平等性은 현재 통상 수집되고 있는 유형의 통계자료로서는 결코 제대로 파악될 수 없다.

(1)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의 분배상태에 이르기까지의 節次的正義(procedural justice)가 특히 중요한 이슈로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사람들이 富의 획득과정에 있어서의 正當性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경제학자들이 흔히 수집하여 사용하는 그 어떤 자료를 가지고도 이 문제에 만족할 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 통계처리에 관한 기존 방법론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개선, 예를 들어 새로운 不平等度指數의 開發 같은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현존하는 不平等度指數는 어느 것이라도 그 본질적인 속성상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으며, 아무리 새로운 불평등지수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이 점에서는 큰 차이가 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법론만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問題의 本質에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分配狀態가 선진국에 비해서도 良好한 편이라든가, 최근 들어 상당히 好轉되어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요즈음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으나, 이것에 공감하고 있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된다.⁽²⁾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分配의 不平等이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라고 대답한 사람이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한 예로 서울大學校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가 1991년 1월에 발표한 1990년 國民意識 調查研究 결과를 보면, 所得隔差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물음에 대해 57.8%가 아주 심각하다고 대답했으며 조금 심각하다고 대답한 사람도 34.0%에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해 전 국민중 무려 91.8%에 달하는 사람들이 所得隔差에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더구나 아주 심각하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1988년의 56.2%에 비해 1.6%가 증가한 數值이다.

경제학자라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통계수치를 무조건 盲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分配問題 같이 主觀的인 느낌이 중요한 경우에는 통계수치가 아무리 객관성을 표방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느낌과 현저히 배치되는 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본논문은 그와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분배적 측면에서 일어난 최근의 움직임을 평가하고자 하는 目的에서 쓰여졌다. 1989년의 글은 다분히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에 걸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최근의 상황전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2) 예를 들어 최근에 발표된 權純源(199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上位 5%의 자산점유율에 있어 미국이 44.1%(1983년), 프랑스가 45%(1977년), 그리고 영국이 43%(1981년)인데 비해 한국은 31.2%(1988년)에 지나지 않아 이들보다 훨씬 平等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所得分配의 지니係數에 있어서도 1988년 현재 0.336으로서 비교에 포함된 11개국 선·후진국중 대만, 스웨덴에 이어 세번째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근년에 이르러 현저한 改善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分配構造의 어떤 측면은 별다른 변화 없이 종전의 양상을 유지해 온 반면에 어떤 측면은 상당한 정도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예전대 分配의 定義와 연관된 質的인 측면에 주로 문제가 있다는 기본구도에는 근래에 들어와서도 별 큰 변화가 없었다. 앞의 글에서 불평등성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했던 政經癒着 내지는 權力型不正이 아직도 굳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枝葉的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동안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1970년대와는 달라진 불평등성의 양상을 보게 되었다. 이 글은 그러한 변화의 성격이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2. 不平等性의 새로운 展開

최근에 오면서 所得分配가 현저히 改善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1988년 이래 적극적인 勞動運動의 결과로 얻어진 급격한 賃金上昇을 그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³⁾ 최근 몇 년 간의 임금 상승이 종전에 비한다면 파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또한 이를 통해 勤勞者들의 生活水準에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왔던 不平等의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었다. 우선 불평등의 핵심은 그대로 온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不動產價格 暴騰 같은 새로운 隔差發生의 원인이 등장함으로써 말미암아 賃金上昇의 효과를 대폭 상쇄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2.1. 不平等構造의 溫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은 여러 가지 요인은 複合的인 결과로서 생겨났다는 점에서 先進諸國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나, 그 요인의 構成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분배상의 불평등은 주로 원래부터 타고난 個人的 與件의 차이나 資本主義 市場秩序의 특성 등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각 사회가 안고 있는 독특한 역사적 배경에 기인하는 偏見 및 差別待遇가 추가적인 불평등의 요인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경제적 게임의 基本的 規則들은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본다. 따라서 너무 큰 소득격차에 의해 국민의 일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데 대해 우리의 소리가 간혹 들리기는 해도, 분배구조 자체의 正當性에 대한 根本的인 批判의 소리는 별로 들을 수 없다.

(3) 예를 들어 앞서 인용한 權純源 박사의 연구결과를 보라.

물론 급진적인 위치에서 비판한다고 할 때 험잡하지 않을 사회는 없겠지만, 이들 사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分配構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이와 같이 資本主義體制 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평등성 외에도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등성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政經癒着이나 權力型不正에 의해 일부 계층에 막대한 부가 돌아가는 현상은 정당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아 생겨나는 不平等性의 대표적인 예다. 成長爲主의 정책기조 때문에 근로자들의 基本權을 제약해 온 것은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기득권계층이 법의 虛點을 교묘히 이용하여 부의 증식 및 상속에 사용하고 있는 것 역시 게임규칙의 실질적인 위배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그들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나, 이러한 허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번번히 알면서도 수수방관해 온 당국의 무언의 협조가 없이는 계속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규칙의 違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不平等의 核心이 그대로 온존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게임규칙의 공정성이란 측면에서 눈에 떨 만한 진전이 없었다는 말이다. 政經癒着構造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金融實名制, 土地公概念 등 최소한의 개혁적 조치는 기득권층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정경유착구조의 확고한 支配하에 있음을 절감할 수 있었다.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이와 같은 改革措置들의 當爲性에 공감하고 있음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기득권층의 반대의견에 손을 들어 주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책의 결정에서 어떤 계층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⁴⁾

水西事件으로 대표되는 대형 疑惑事件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구조의 청산은 아직도 먼 과제라는 현주소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사건은 애당초 政經癒着構造가 없이 도저히 발생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수습과정에서 개운하지 못한 뒷맛을 남긴채 적당히 일버무러줬다는 점에서 政經癒着의 의혹을 더욱 강하게 풍기고 있다. 단지 우리들에게 알려진 사실만 종합해보아도 이 사건이 정경유착의 산물이었다는 결론을 내기에 충분하며, 우리가 채 알지 못하는 것은 背後의 정경유착구조가 과연 얼마나 큰 규모의 것이었느냐라는 점 뿐이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서도 역시 金融實名制가 실시되고 있었으면 어느 정도 사전예방이 가능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아

(4) 이들 改革措置가 대통령선거시의 公約事項이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서해안 개발, 제주도 개발, 주내 200만호 건설, 경부고속철철사업, 대진 맥스도 등 문제점 투성이의 사업들이 단지 선거공약사항이었다는 명분 하나로 온갖 비판을 부릅쓰고 原案대로 強行되어 온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쉬움을 준다.

분배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는 단순히 앞으로의 분배를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의 정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했던 過去의 清算도 요구된다는 측면이 있다. 富의 형성과정에 증대한 道德的 缺陷이 있었다는 인식이 팽배한 이 마당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선에서 과거에 대한 철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分配構造의 正當性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없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청산이란 측면에서의 진전은 거의 없었고 現狀固着의 경향만 두드러지고 있었다. 과거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어떤 경로를 통했든간에—이미 무를 축적해놓은 사람들의 經濟的 優位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 사회를 힘쓴 民主化의 열풍은 정부에 대한 財閥의 交涉力이 강화되는 아이러니를 가져 왔다. 民主化의 바람을 가져 오는 데 있어 별반 공헌한 바도 없으며, 그로 인한 勞使紛糾 등에 눈살을 찌푸렸으면 찌푸렸을 이들이 이 바람을 타고 발언권이 강해지는 이득을 얻게 된 것은 크나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독재적인 정권 밑에서는 순죽이고 돈버는 데만 몰두해 오던 그들이 갑자기 소리를 높여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의 주장중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나 자신들의 既得權 保護를 위한 요구도 상당 부분 섞여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과거에 있었던 不公正이 철저히 청산되기는 커녕 오히려 현상을 固着시키려는 노력만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따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최근 들어 정부는 일부 財閥에 대해 일견 의아하게 생각될 정도의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행동의 一貫性이 缺如되고 있기 때문에 그 眞意조차 의심받고 있는 형편이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賃金이 ‘過多하게’ 上昇했다는 주장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임금이 너무나 빨리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輸出競爭力에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말 그 자체에는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기술의 뒷받침 없이 오직 低賃에서 수출경쟁력을 얻고 있는 현실에서 그 정도의 임금상승이 커다란 壓迫要因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과다하게’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함축은 근로자들이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몫보다 훨씬 더 큰 몫을 가져 갔다는 것이다. 賃金이 과다하게 올랐다는 표현이 이 의미를 주로 하여 쓰이는 경우라

(5) Nozick(1974)이 설파한 自由主義의 분배정의론에서 과거의 不正義에 대한 是正이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에 주의하라.

면 조금 더 세심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20년을 넘는 기간 동안 근로자의 정당한 權利가 制限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생활 수준은 상대적으로 落後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단 몇 년간의 빠른 임금상승을 통해 완전히 시정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론적 차원에서 도출된 適正 上昇率과 실제의 上昇率을 비교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 적정한 임금상승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價値 判斷이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客觀的인 基準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⁶⁾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실제의 임금상승폭이 적정수준을 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임금상승폭의 적정성이란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生活水準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심을 돌린다고 할 때, 만족할 만한 改善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 일어난 임금상승을 통해 긴 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온 相對的 窮乏이 단숨에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이다. 더구나 급격한 物價上昇과 住宅 價格의 暴騰은 이렇게 힘들여 달성된 임금상승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후 보다 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같은 급격한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經濟的 地位에는 현저한 개선의 징후를 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최근에 들어오면서 과거에 자행되었던 바와 같은 勞動運動의 彈壓은 많이 그 자취를 감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잔재가 상당히 남아 公正한 勞使關係의 정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본다. 勞動運動은 아직도 그것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기보다는 몇몇 과격분자들의 부추김에 의한 터무니 없는 요구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다. 노동운동의 파괴적인 사례만 부각시키며 이것이 노동운동의 經驗不足에서 오는 일시적인 현상이란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몇 년간의 빠른 임금상승과 노동운동탄압 분위기의 이완으로 勤勞者의 經濟的 地位에 약간의 개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過去의 完전한 清算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미흡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2.2. 새로운 不平等要因의 登場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존재해오던 不平等構造는 근래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형편에 있다. 그런 와중에서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눈에 띄는 하나의 변화가 일어

(6) 適正한 임금상승의 幅이 어떤 것이냐의 이론적 고찰과 한국 현실에의 적용사례를 보기 위해서는 金榮培·尹鳳駿(1991)을 참조하라.

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不動產價格의 급격한 상승이 分配의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일이다. 그 동안 부동산가격은 때를 가리지 않고 부단히 상승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의 상승속도는 특히 빨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 점에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점은 不動產價格의 급등이 이 시기를 특징지우는 새로운 不平等의 要因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 전반 이전에 불평등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각종 特惠, 權力型不正, 노동운동의 彈壓 등이었다면, 1980년대 후반부터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에서 나오는 엄청난 量의 ‘不勞所得’으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가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不動產에 대한 投資가 가장 확실하고 수익성 높은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이라면 우선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려는 성향을 보여왔다. 성장과정에서 소외된 貧困階層은 최소한의 住居空間마저 확보하지 못하는 한편, 부유층들은 도시, 농촌, 산지를 가리지 않고 마구 사재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결과 부동산 所有構造는 극도로 集中된 양상을 보이게 되었으며, 잇달아 나타난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를 회복불가능한 수준으로 벌려놓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면서 不動產價格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정부의 몇 가지 ‘失手’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와중에서 집권당은 거의 무분별하다고 해도 좋을 만큼 전국 각지의 개발을 약속하였다. 물론 이것이 선의에서 나온 약속이었을 수 있으나, 우리 사회의 독특한 분위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부동산투기의 불에 기름을 보태는 역할을 했었음을 쉬게 짐작할 수 있다. 投機의 열풍은 항상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상식처럼 되다시피 한 일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집권층이 나서가지고 이 지역 저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은 기회만을 노리고 있던 투기꾼들에게는 놓쳐서는 안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만 끝이 되었다.

더구나 이 때는 三低好況을 통해 축적된 돈이 제대로 갈 바를 모르고 주춤거리던 상황이였다. 당시 뜻하지 않은 호황에 고무되어 안일한 분위기에 빠져 있던 정책당국자나 기업가들은 그 여유자금의 社會間接資本形成이나, 設備投資 혹은 技術開發投資에 긴급히 쓰여야 할 돈이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안일한 자세로 말미암아 고삐가 풀려 있었던 막대한 돈이 不動產投機라는 가장 非生産的인 用途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당시 정부가 지지른 또 하나의 실수는 정부 내의 의견조정도 끝내지 않은 채 아파트分

讓價를 現實化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일이다. 그 때의 經濟的 狀況으로 보아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에 묶여 있는 분양가를 현실화, 즉, 上向調整하는 것이 불가피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이 정부 내에서도 반발에 부딪쳐 주춤하던 중에 아파트 가격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오르기 시작했고 一般住宅의 가격도 덩달아서 뛰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부의 優柔不斷으로 말미암아 애초에 의도되었던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주택가격만 올려놓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이처럼 애초에는 善意的 의도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 政策上의 실수가 부동산시장을 술렁거리게 하기 시작했을 때 정부가 보인 대응자세는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다음 節에서 더욱 자세하게 논의하게 되겠지만, 정부의 대응은 한번 티오르기 시작한 불을 끄기에는 티무니없이 力不逮이었던 것이다. 不動產市場은 촉발의 형세를 보이게 되었고 우리 경제, 사회는 危機의 局面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 이래의 새로운 전개란 바로 이와 같은 경로로의 상황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不動產價格의 急騰이 새로운 不平等性의 주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다음의 두 각도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이것이 소수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엄청난 量의 不勞所得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불평등성을 더욱 深化시켰다는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즉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 사람을 더욱 부자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불평등성의 심화를 가져왔다는 측면이다. 둘째로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無住宅者가 대부분인 貧困層에게 주거관련 生計費의 上昇이란 형태로 압박을 가져 왔을 뿐 아니라, 내집마련의 꿈을 무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각도에서도 문제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가격 상승은 실질적인 貧富隔差를 더욱 벌려놓은 효과를 가져왔으나, 分配統計는 이렇게 명백한 효과마저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소득분배 관련자료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는지에 대해 약간의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것처럼 명백한 변화라도 우리가 보는 分配統計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함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不平等度指數를 통해서 부동산가격 상승이 분배적 측면에 가져다준 波長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결국은 과감한 가정을 동원해 얻은 추정결과라든지 아니면 質的인 논의를 통해 가늠해보는 길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李廷雨(1991)의 추정에 의하면,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긴 資本利得의 규모가 GNP의 몇 십 퍼센트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라고 한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1989년의 경우 가장 큰 推定値는 53.5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

장 保守的인 추정치도 19조원에 달하고 있다. 李教授가 가장 큰 신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추정방법, 즉 실제토지거래실적에 근거해 추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를 보면 31.8조원으로서 당해 연도 GNP의 18.9%에 달하고 있다.⁽⁷⁾ 또한 그는 1988년에서 1990년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발생한 資本利得이 특히 규모가 큰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⁸⁾

이 數値들이 매우 과감한 가정하에서 얻어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制約條件들을 감안해볼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얻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리들의 직관과 과히 어긋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단 부동산가격 상승이 가져다준 자본이득을 李教授처럼 토지에 한정해서 계산할 경우 建築物과 관련되어 나오는 자본이득을 제외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총자본이득의 크기는 그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資本利得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별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것이 어떤 階層에 얼마 만한 크기로 귀속되었는가를 알아내는 方法에 있다. 李教授는 기존의 부동산보유 분배통계에 의거해 자본이득을 계층별로 귀속시키는 접근법을 써서 資本利得이 감안되었을 때의 분배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관찰하였다. 예상대로 자본이득을 포함시켰을 경우 不平等度가 현저하게 상승하는 결과를 얻고 있지만, 필자가 생각하기로 실제의 불평등도 상승폭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지 모른다. 이것은 느낌의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히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의 부동산보유의 分配現況과 分配統計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

부유층에 엄청난 資本利得이 생겨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것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資本利得이 단순히 부유한 사람을 더 부유하게 만든다는 사실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굴러들어오게 만드는 현행 分配構造의 不當性이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예견하고 미리 사두는 것이 그 자체로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資本主義體制下에서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득을 남기는 일은 지극히

(7) 實際土地去來實績에 기초하여 얻어진 推定值도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그 중에서도 작은 것이다. 더 큰 자본이득의 추정치는 43.4조원으로서 GNP의 25.8%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8) 李性旭(1991)도 韓國銀行 발행 『經濟統計年報』에 입각한 자본이득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1988년과 1989년에 각각 67.9조원 및 85.0조원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어 李廷雨 교수의 수치보다 오히려 더 크다.

(9) 예를 들어 富裕層의 경우 어떤 토지가 실제로는 본인의 소유이면서도 타인의 이름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분배통계가 이를 적절히 감안하고 있는지는 심히 의심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러운 經濟活動의 하나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不動產市場도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公平하게 그리고 效率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에 한해서 타당한 말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부동산에서 나오는 자본이득은 그 正當性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부동산시장이 이상적인 환경하에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현실의 부동산시장은 경제생활의 요구에서 나오는 未來要求를 충족시켜 준다는 정상적인 기능보다는 一攫千金의 꿈을 충족시켜주는 장소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더 강한 非正常的인 성격을 보여온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價格은 시장의 본질적 요인이 아니라 投機의 열풍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보이게 되었다. 많은 경우에 있어 가격상승의 豫想은 실제에 있어서의 가격상승으로 實現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손쉽게 벌어들일 수 있는 利得을 가져다 줌을 보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이 손쉬운 이득이 그림의 떡에 불과했을 뿐이며, 모든 이득은 애초부터 가진자들의 排他的인 클럽이 독차지해 왔다는 데서 不公平性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또한 부동산투기가 많은 경우에 권력구조 상층부에서의 政經癒着 혹은 그보다 낮은 단계에서의 공직자와 투기자 사이의 결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開發의 情報를 사전에 흘린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준다면 가라는 등의 방법으로 공직자들이 투गी이득의 획득에 一助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투गी에 의한 자본이득은 公正한 게임의 規則을 위반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을 만들게 된다.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資本利得에 正當性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 기인하는 부분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企業이 不動產投機에 열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특히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 자금을 사용하면서까지 부동산을 사재기 마쁜 大企業의 행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써야 했을 자금의 몫까지 대기업들이 끌어다 쓰고 있는 현행의 금융구조하에서의 일이라 더욱 그 深刻性이 크다. 많은 負債를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납득하기 힘들 만큼의 非業務用 부동산을 움켜쥐고 있는 이들의 행태를 볼 때, 이들이 우리 사회에 번진 不動產病의 主犯이라고 비판해도 별로 반박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이들 기업에게도 막대한 資本利得을 가져다주었으며, 우리 경제와 같이 기업들의 소유구조가 극도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所有者一族에게 엄청난 자본이득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 왔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투기가 만연된 상황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은 일부 계층에 천문학적인 ‘不勞所得’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분배의 불공평성을 한층 더 深化시켰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分配側面에 끼친 惡影響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로 인해 無住宅庶民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은 실질적인 면에서 본 때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왜냐 하면 부자가 더욱 부유하게 되는 것의 효과는 다분히 심리적인 것임에 비해, 빈곤층의 生計에 대한 威脅은 현실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주택의 賃貸料까지 따라서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로부터 제일 큰 타격을 받게 된 계층은 물론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들이다. 낮은 소득으로 인해 貯蓄餘力이란 거의 없는 판국에 전세금을 대쪽 올리네기를 요구받았을 때 이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¹⁰⁾ 이것은 단순히 집없는 설움이란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住居空間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내쫓기느냐의 갈림길로 몰아넣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가장 최근의 건설부 발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自家住宅保有率은 5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와중에서 전 인구의 거의 半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광풍이 한창 절정에 다달았을 때, 오른 전세값을 내지 못하고 자살의 길을 선택한 가족까지 생겼다는 것은 그 일의 비극성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不動產價格의 上昇이 분배측면에 가져온 주름살은 이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무주택민민의 경우 정상적인 貯蓄을 통해 내집을 장만한다는 꿈이 훨씬 더 멀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國民住宅規模의 집을 장만하는 데 몇 달분의 봉급이면 되던 것이 이제는 얼마만큼 더 모아야 하는가와 같은 간단한 계산을 통해 쉽게 보일 수 있다. 그 소득을 가지고 고선 먹고살기조차 빠듯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이 근근히 모은 저축을 가지고는 집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임금이 두 자리 숫자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不動產價格의 上昇으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은 오히려 종전보다 더 큰 相對的 剝奪感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住宅普及率, 즉 전체주택수를 전국의 總家口數로 나눈 비율 자체가 72.1%에 불과한 상황에서 供給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무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높아진 不動產價格 때문에 기존의 주택값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負

(10) 당시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專賃契約의 最低期間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한 정부의 조치였다. 賃入者를 보호한다는 취의의 개입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했던 것이다.

擔可能한 값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일도 그만큼 어려워졌다. 무주택민에게까지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전통에서 내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누구나 쉬게 포기하지 못하는 끈질긴 꿈이다. 商業的인 賃貸住宅의 전통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가 자그마한 것이라도 자기의 집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 모두에게 이 소박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經濟體制의 기본적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본적 의무를 달성할 수 없도록 만든 현재의 분배구조가 실패작이라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50%의 住宅所有者와 나머지 50%의 無住宅者로 양분되어 그 경계는 넘기 힘든 장벽으로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특히 두드러지기 시작한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새로운 不平等性의 要因으로 등장했다는 주장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가 갖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분배상황에 대해서 갖는 不滿의 대상도 政經總着 또는 權力型不正에서 최근에는 점차 이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래 우리 사회의 현안과제가 되어 있는 不動產投機의 문제는 이처럼 심각한 분배상의 含意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정책상의 過誤가 특히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3. 政府의 對應

1960년대에 시작된 高度成長過程에서 분배의 불평등성이 심화되기 시작된 때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부의 責任이 크다고 생각한다. 1970년대까지는 당시의 權威主義的 統治 분위기와 맞물려 불평등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극도로 제한을 받았었다. 그러나 政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平等性의 回復을 위한 노력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오고 나서부터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약속대로 평등성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별로 찾아볼 수 없고, 많은 경우에 문제의 핵심을 미끼간 彌縫策에 급급했던 것으로 비쳐졌다. 이節에서는 불평등성에 대한 政府의 對應을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시기에 중점을 두고 평가해보고자 한다.

3.1. 金融實名制의 挫折

第6共和國은 그 출범과 더불어 공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감한 改革政策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조치로서 대통령 임기내 金融實名制의 실시와 土地公概念의 정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金融實名制의 경우, 이에 관한 준비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財界人士들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세력의 抵抗에 부딪쳐 결국은 無期延期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또한 土地公概念의 경우에도 既得權層의 교묘한 로비에 의해 핵심이 될만한 부분은 전부 빠져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과거에도 정부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는 속셈으로 공평성의 회복 약속을 해놓고서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경험한 바 있는 국민들이 이번에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기대했지만 또 다시 좌절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금융실명제의 反對者들이 주장한 바 있듯이 이것이 실시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하루아침에 公정한 社會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더 많은 쌀과 옷을 가지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改革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이 제도의 실시를 그토록 바랐던 것은 이를 통해 公正한 게임의 規則이 적용되는 사회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을 유발하는 여러 유형의 행위들이 이 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모두 그 자취를 감출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牽制라도 받게 되는 효과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 制度가 실시될 때 가장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될 계층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 때까지 變則인 金融去來를 통해 덕을 보아온 既得權層일 것이다. 이들이 반발하고 나설 것은 누구라도 예상 못할 바가 아니었으나, 막상 논의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그들의 저항은 예상 밖으로 잘 조직된 양상을 보였다. 그들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이용한 무기는 당시 三低好況이 끝난 후 構造調整期에 들어간 우리 경제의 상황이었다. 어차피 사저호황같은 非正常的인 好況은 오래갈 바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원래의 궤도로 돌아왔을 경제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빌미로 과도한 危機意識을 조장하면서 실명제 실시가 시기상조임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잘 조직된 반대세력에 비해 이 제도의 실시를 바랐던 사람들의 의사표출은 매우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이었다.⁽¹¹⁾ 당시의 輿論調査 결과를 보면 숫자상으로는 언제나 찬성하는 쪽의 비율이 반대하는 쪽을 상당히 압도하는 쪽으로 나타났지만, 잘 조직된 소수가 社會的 분위기를 주도해 가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政府는 마치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실명제 실시의 無期延期를 결정하고 말았다. 정부가 잘 조직된 소수에 이끌리 스스로 천명한 개혁의 의지를 포기한 순간이었다.

(11) 금융실명제 실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사표출이 非效率的이었다는 것은 그들의 논리가 취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의 言論이 이들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도 있을 것이며, 또한 찬성자들의 속성상 조직되지 못한 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金融實名制의 포기가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 회복되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임은 다시금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代價로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던가를 묻고 싶다. 당시 그 제도의 실시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우리 경제가 危機狀況임을 들어 더 이상의 衝擊을 주지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지금 實名制의 충격 없이도 위태스럽게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있다. 다음 節에서 더욱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우리 경제가 오늘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분배상의 不公平性이 누적되어 온 데에 보다 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금융실명제가 당장의 입맛에는 쓰더라도 병의 원인을 다스리는 약의 구실을 할 수도 있었는데 성급히 포기해 버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事後的인 評價이긴 하지만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던 때였다고 볼 수 있는 그 당시가 금융실명제 실시의 適期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제도의 실시와 관련해서 제일 걱정스럽게 생각했던 점은 經濟秩序의 再編에 따르게 될 비용이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차피 경제질서의 재편은 불가피했으며, 그럴 바에야 아예 根本的 革新을 통해 새로이 출발하는 편이 나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金融實名制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繁盛할 수 있는 부류의 기업가가 있다면 이 제도가 실시된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는 유형의 기업가도 따로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전의 환경에서 地下經濟的 去來에 능숙한 기업가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면, 실명제 실시로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하는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企業家精神 (entrepreneurship)을 소유한 사람에게로 比較優位가 옮겨갈 것이다. 기득권계층이 실명제 실시에 한사코 반대했던 것은 바로 이 점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며, 정부가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制度의 실시를 관철시켰다면 참신한 企業家群의 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을 것이다.

3.2. 土地公概念의 實質的 拋棄

우리 경제의 제반 要件을 고려해볼 때 토지의 소유와 사용에 관해 개인의 絕對的이며 排他的인 權利를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일종의 사회적 合意가 이루어져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公共部門의 적절한 간여를 통해 토지가 公益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처음에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土地公概念의 정착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반대파의 논리에 눌려 가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원래의 의도는 완전히 퇴색되고 실질적으로 이를 포기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었다.

土地公概念의 정착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시도된 몇 가지의 구체적 정책에 問題點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보유택지에 200평이라는 物理的 上限을 경직적으로 설정해 놓는 등의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반대파들은 문제점의 지적을 통해 보다 合理的인 制度의 정착에 힘쓰려 한 것이 아니라, 토지공개념 자체를 빈 껌테기로 만들어 버리는 작전을 사용하여 결국 성공을 거두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政策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좌초하고 말았다는 시각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던지간에 기득권층은 어차피 다른 반대할 구실을 찾아내고야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정부가 소수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을 억누를 힘을 갖추지 못했던 데 있었다. 국민 대다수가 토지공개념의 정착을 원했어도 결국은 少數의 壓力에 굴복해 버릴 수밖에 없는 政治構圖가 바로 失敗의 原因이었던 것이다. 대신에 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하라고 압력을 넣는 등의 臨機應變의인 정책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이 임의적인 行政指導에 불과함을 간파한 기업의 반발로 말미암아 한 동안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토지공개념 정착을 위한 立法의 뒷받침만 있었다더라도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이라는 해묵은 과제는 손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土地公概念이 빈 껌테기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의 좌절감은, 투기의 바람이 좀체로 꺾이지 않고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데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政府가 별 대책 없이 방황하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이 사회를 거의 危機의 지경에까지 몰고가게 되었다. 최근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관찰해볼 때 정부가 조금만 일찍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면 사태가 그와 같이 악화되는 것을 충분히 防止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요즈음 부동산경기가 沈滯되어 투기의 열기도 현저히 수그러든 것을 볼 수 있는데, 경제 전반의 침체가 不動產市場의 沈滯도 초래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정부의 投機抑制政策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는 토지공개념의 본격적인 정착을 포기하는 대신 일련의 微溫의인 대책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미온적인 대책들이 바로 지금 투기의 바람을 재우는 데 기대 이상의 效果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과거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해 왔기 때문에 사태가 걸잡을 수 없이 악화된 것이었고, 조금만 서둘러 진지한 노력을 했어도 쉽게 수습될 수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우리 사회의 여건으로 보아 부동산투기의 문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설부른 悲觀論이 아무런 설득력도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不動產市場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잠잠함이 一時的인 것인지 아니면 持續的인 것인지

지 지금 이 시점에서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며, 배가 되면 인제고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潛在力이 남아 있다고 보는 쪽이 옳으리라고 본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微溫의인 政策만으로 그와 같은 상황의 再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설사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 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土地公概念의 정착을 통한 根本的인 改革이 없다면 이미 발생된 불평등의 시정이란 영영 불가능한 숙제로 남게 될 것이다.

3.3. 不公平한 租稅制度

資本主義의 市場秩序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分配上의 不平等은 조세제도의 公正한 運用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累進的인 조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富의 再分配를 추구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도 이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제도 자체상에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제도가 공평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까지 겹쳐 원래 의도된 바의 再分配效果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租稅制度 改革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지만 근래에 와서도 어떤 可視的인 改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所得稅를 포함한 直接稅의 비중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재분배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問題點을 안고 있다. 정부는 몇 차례의 개혁시도를 통해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보려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별다른 조세저항 없이 쉽사리 거두어질 수 있는 間接稅, 특히 附加價値稅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나머지 미온적으로 改革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租稅制度가 그나마 公平하게 運營되지도 못한다는 데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자신의 經濟的 能力에 걸맞는 租稅負擔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왔으며, 사실에 있어 이러한 인식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 事業所得者나 醫師, 辯護士 같은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최고소득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내는 所得稅는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企業家들도 여러 가지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얻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결국 中産層에 불과한 中産階級자만 어김없이 所得稅를 남부하게 되어 이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財閥그룹들의 相續・贈與稅 脫稅是非는 조세제도가 과거에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재벌들이 조세제도상의 虛點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거의 돈 한푼 들이지 않고 富의 세습을 해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

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政府는 이에 대해 制度上의 虛點을 시정해보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채 수수방관해 왔다. 재벌순위 10위 안에 드는 巨大企業群이 10억원도 안되는 세금, 즉 웬만한 큰 집값도 안되는 세금만으로 二世承繼되고 있는 명백한 불합리성을 보고서도 못본 척해 온 것이 정부였다.

최근에 變則相續是非로 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벌그룹도 전혀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감히 주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實定法하에서는 단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강조함으로써 세계상의 虛點을 이용해 왔다는 사실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그들이 그와 같은 非倫理的인 행위를 했으면서도 오히려 정부에 역습을 가하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政府側에도 분명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다. 租稅制度에 뚫린 구멍을 애초에 막았다던가, 아니면 이번 일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치밀성으로 누가 관련되었던 간에 모든 의심나는 부분을 뒤진다는 일을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역습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정부의 행위에 一貫性이 缺如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措置의 正當性을 의심해도 할 말이 없을 수 밖에 없다.

사실 비슷한 크기의 두 재벌그룹중에서 한 쪽은 기껏 100여억원의 상속세만 가지고 완벽한 二世承繼가 가능했던 터에, 다른 한 쪽에게는 부분적인 승계에만도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요구했을 때 그들이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최근에 오면서 이와 비슷한 조사를 주요 재벌그룹에 대해 광범하게 실시하겠다는 方針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얼마나 一貫되게, 그리고 얼마나 強力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수행하게 될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과거와 같이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려서 흐지부지해 버린다면 또 한 차례의 惡循環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租稅制度나 이의 運營이란 측면에서 아직은 어떤 뚜렷한 改善의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견제하는 장치로서의 조세제도는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不平等性을 더욱 부추기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만이라도 능력에 맞게 내고 있다는 의미에서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公平性의 原則마저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3.4. 不適切한 社會福祉制度

1980년대 후반에 들면서 社會福祉制度의 측면에서는 약간의 개선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國民年金制度가 실시된 것이라든지, 1989년도에 도시거주 自營業者들이 醫療保險에 포함됨으로써 國民皆保險制度가 실현된 것 등은 명백한 개선의 실

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복지사회시대로 들어갔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우선 國民年金制度만 하더라도 초기단계인 지금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거두어들이기만 하는 단계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통한 老年層의 生活安定이란 효과가 아직은 이렇다하게 발휘되고 있지 못한 형편에 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국민연금제도는 현 단계에서 資本動員手段으로서 보다 效率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실시단계에서 정부는 단기적인 자본동원 잠재력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것의 사실여부를 판가름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이 제도를 통해 조성된 基金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실적을 보면 그러한 느낌이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그 기금이 보다 收益性 높은 곳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財政投融資事業에 쓰이고 있는 사실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貧困階層에 대한 公的扶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生活保護事業의 경우에도 보조의 規模나 質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일어났다고 보기 힘들다. 예컨대 보호대상자 책정기준, 즉 이 사업의 受惠者가 될 수 있는 소득의 수준이 변화해 온 추세를 보면, 매년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小幅上昇만을 허용해 왔기 때문에 수혜자의 수가 계속 줄어온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업의 초기단계인 1960년대에는 受惠者가 총인구의 10%를 넘었었는데 그 후 점차 줄어 1990년도에는 5.19%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빈곤을 탈출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며, 정부가 豫算上의 制約 때문에 수혜자의 증가를 인위적으로 억제해 온 데 기인하는 부분이 큰 것으로 생각한다.

生計保護의 내용을 보아도 근래에 들어오면서 획기적으로 그 質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할 수 없다. 現物이나 現金補助가 매년 물가상승도 채 반영 못할 정도로 조금씩 올랐지 이들의 생활의 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정도로 관대해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¹²⁾ 이들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보조만으로 이들이 인간다운 最低生活을 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身體障礙, 無依託老齡, 缺損家庭 혹은 기타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빈곤의 늪에 빠질 수 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희망 있는 미래는 고사하고라도 당장 오늘의 인간다운 생존조차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經濟成長만이 至上目標이며 이

(12) 예를 들어 居宅保護對象者の 생계보호 내역을 보면, 1981년에는 하루 1인당 白米 288g과 精麥 138g에다가 월 11015원의 現金補助를 해주었는데, 1990년에는 이 수치가 겨우 白米 341g, 精麥 85g 그리고 현금보조 39000원으로 증가되어 있다. 또한 부식비와 연료비 지원액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極貧者들에 대한 지원의 절대적 수준이나 증가추세 어느 것을 보아도 결코 후하다는 인상은 받을 수 없다.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 어느 것도 부차적인 중요성밖에 가질 수 없다는 成長第一主義의 殘滓가 아직도 우리 주위에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입으로만 福祉社會의 건설을 외쳐 왔지 이의 구체적 실행에 필요한 전제조건인 福祉豫算의 대폭 擴張에는 상당히 인색해 왔다.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같이 비슷한 정도의 시급성을 가진 사업과 경쟁해야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복지에 산만 대폭 올리기는 힘들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國防費의 부담이 과중한 데다가 이를 성역시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크다는 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公正性의 回復을 위한 개혁도 부진한 터에 복지사업마저 現狀維持가 고작이라면 분배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마땅 수 없는 꿈일 수밖에 없다.

4. 分配의 不平等과 社會霧圍氣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잘못하다가 이대로 주저앉고 말지도 모른다는 危機感이 감돌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이 진정한 위기국면인지 아니면 過渡期的 調整期인지는 훗날에 가서야 정확하게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 어려움의 직접적 원인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고 있는 賃金上昇이며, 過消費現象이나 勤勞意慾 減退現象 등이 먼 원인으로서는 지적되기도 한다. 研究開發投資의 부진으로 말미암은 生産技術上의 問題點을 거론하는 경우도 있으나, 바로 이 시점에서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라기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오늘의 이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으로서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지 분명해진다. 어려운 經濟與件도 감안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무리하게 賃金引上을 요구하고,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면 그나마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勤勞者가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니냐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음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달리로 표시한 平均賃金의 국제비교를 보거나 勤勞生産性의 국제비교를 보면 자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韓國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아시아에서 日本 다음으로 높고, 그러면서도 生産性은 臺灣이나 싱가포르의 근로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統計資料들이 하루가 멀다 싶을 정도로 자주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다.

이 통계수치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단순한 數値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근로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간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의 근로자들이 이 통계수치가 시사하는 바대로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높은 實質所得 혹은 生活水準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근자에 이르러 名目賃金率이 종전에 비해 빠르게 상승한 것은 분명하지만 생계비 역시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생각한 것만큼 클 수가 없다. 더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동산가격이 급등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相對的 窮乏이 深化되었다는 점까지도 감안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物價上昇 자체가 과도한 임금상승 때문에 촉발되었다고 지적할 것이다. 우리 경제에는 지난 몇 년간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새로운 임금상승의 원인의 되는 惡循環이 있어 왔다. 이 악순환의 始發이 1980년대 말의 갑작스런 임금상승이었다고 주장하는 데는 일리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왜 그 때 마치 붓물이 터지듯이 勞使紛糾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임금도 따라서 뛰게 되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權威主義的 統治에 의해 억눌려 오던 근로자들의 요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때 격렬한 힘으로 분출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들에게 선진국의 근로자에게서나 볼 수 있는 成熟性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의 격렬한 勞使紛糾와 이에 따른 임금상승은 그 동안 늘려오던 힘에 대한 자연스런 反動에 지나지 않았음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상황을 초래한 원초적인 責任은 근로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들을 억눌러 왔던 정부와 그렇게 되기를 바랐던 기업가에게 있었으며, 나아가 이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不公正한 分配構造에 보다 근본적인 책임이 있었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歷史的 背景을 무시하고 근로자들의 과도한 賃金引上 요구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가 아닐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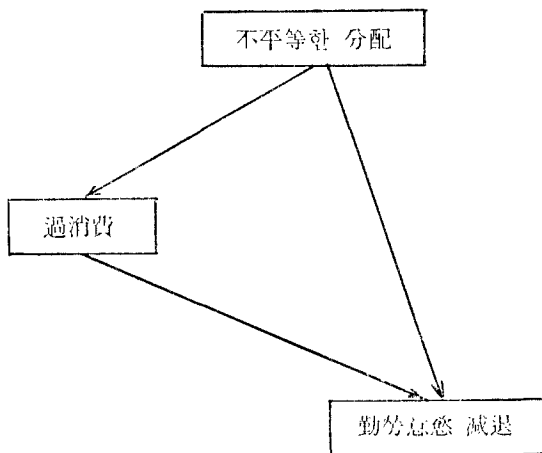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統計數值가 의미하는 바를 엄밀하게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勞動生産性의 수치가 높을수록 근로자 1인당의 생산기여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 수치가 낮다고 해서 근로자가 그만큼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티무니없는 오해이다.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자신의 보다 強度높은 작업에서 나올 수도 있으나 더욱 중요한 決定要因은 작업의 배경, 즉 經營組織, 生産技術 혹은 資本裝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일하는 두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더 좋은 배경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쪽의 生産性이 높게 나올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은 결국 低賃金에서만 比較優位를 찾아오던 경제구조의 유

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안일하게 低賃金에만 의지하고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책의 마련에 게을리해 온 탓에 오늘의 문제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勞動生産性은 낮는데 임금수준이 높아 價格競爭力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형식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으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회복을 위해 근로자가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勤勞者가 모든 責任을 떠맡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不公平한 일일 뿐 아니라, 노동비용의 절약 하나만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요즈음 우리 사회에 勤勞怠愆이란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혼쾌히, 그리고 모든 일을 보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태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필자도 절감하고 있다. 다만 이 문제의 根本的 原因이 무엇이며 해결책이 무엇이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을 따름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근로의욕 감퇴의 문제는 또 하나의 다른 문제 즉 過消費의 問題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나아가 이 두 문제는 分配構造의 不公平性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하게 말한다면, <그림 1>에서 보여지고 있는 바와 같이 불평등한 분배구조가 過消費現象과 근로의욕 감퇴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또한 과소비현상 때문에 근로의욕이 한층 더 감퇴되는 결과가 빚어졌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중 많은 부분이 궁극적으로 分配上의 不平等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림 1> 社會的 病理現象의 相互關係

‘過消費’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 사회에 흥청망청 쓰는 消費生活의 풍조가 생겼다는 단순한 의미에서 過消費라는 말을 쓰고 있다. (13) 맨 처음에 어떤 계층이 이 풍조를 선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만약 상식을 동원하여 추정해본다면, 어렵게 富를 축적한 사람보다는 손쉽게 축적한 사람일 可能性이 높을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는 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이와 같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추정이 단순한 蓋然性 이상의 正確性을 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손쉽게 벌어들인 돈이라야 흥청망청 쓸 수 있지 근근히 절약하여 모은 돈이면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이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이지 않고 富를 축적할 수 있게 만든 사회분위기야말로 過消費現象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손쉽게 벌어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政經癮着構造를 통하여 한꺼번에 큰 돈을 벌어들인다거나 不動產投機를 통하여 앉아서 不勞所得을 얻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公正한 分配構造下에서 라면 이와 같이 손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결코 흔할 수 없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랫동안 不公正한 分配構造를 온존시켜 왔기 때문에 과소비가 발생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한편, 不公正한 分配構造는 일반 대중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줄’만 잘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분위기에서는 고지식하게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보다 한몫 잡을 기회나 노리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더 큰 賞을 주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美德이라고 아무리 말해보았댔자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

힘든 노동에서 벌어들인 하찮은 돈을 그나마 다 쓰지 않고 근근히 모았는데도 오른 전세 금조차 낼 수 없음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왜 그 동안 힘들여 일해 왔으며 왜 먹을 것 못먹고 절약해 왔는가에 대해 심각한 懷疑를 가지게 될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이웃에 있는 어떤 사람은 매일 빈들거리며 노는 것 같은데도 돈이 넘쳐흐르는 것까지 본다면 자신에 대한 회의는 사회에 대한 敵愾心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13) 어떤 사람은 過消費가 분수에 넘치게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만약 과소비를 이와 같이 정의한다면 정말로 부유해서 사치스런 소비생활을 하는 것은 과소비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支拂能力이 있고 없고를 떠나——급격히 消費水準을 높인 현상이다.

過消費의 바람은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社會劣圍氣를 한층 더 들뜨게 만들어 차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깨뜨리고 있다. 奢侈, 享樂産業의 번창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즐길 수 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젊은이들이 좀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하여 근로현장을 외면하고 향락업소에 모여들게 만드는 副作用도 만들어냈다. 이들을 나무라기 전에 애초에 왜 그와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며 누가 원초적인 責任을 져야 할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不公平한 分配 때문에 생겨났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자의 相關關係는 의심할 나위없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타난 현상에만 집착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으려 하는’ 勤勞者들을 질타하고, ‘분수에 넘치게 낭비하는’ 庶民들을 꼬집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접근법으로 당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危機의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사회를 지탱하는 道德的 基盤이 崩壞된 것에서 찾아야 한다. 불공정한 분배구조하에서는 성실하게 일해야 할 이유를 찾기도 힘들지만 원칙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준수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政經癒着 혹은 權力型不正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겠지만 이들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波及效果는 생각 밖으로 클 수 있다. 더군다나 이들이 사회의 指導層을 자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도덕적 결함은 온 사회의 물을 탁하게 만들고도 남을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썩지 않고 아직도 健全性을 견지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한 동안을 헤매보아도 쉽사리 찾지 못할 것이다. 이 사회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는 최후의 良心의 보루라고 해야 할 教育界가 보이는 추한 모습을 보는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教育界가 이러할진대 다른 부문은 어찌하리라는 것은 구태여 따져볼 필요조차 없다. 한 십년 전만 하더라도 제일 큰 문제중의 하나로 꼽혔던 것이 公職者들의 非理였다. 그러나 이제는 공직자들만을 집어내어 그 비리를 탓한다는 것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社會의 구석구석에 非理가 침투해 있다. 不公平한 分配構造가 소수 上層部의 墮落으로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전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단계로까지 진전된 것이다.

5. 맺 음 말

市場機構가 不公平性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며, 自由放任

下의 시장기구는 오히려 문제를 惡化시키기 십상이라는 것이 거의 상식처럼 되어 있다. 그렇다면 오직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만이 분배의 공평성을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에 들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不平等의 심화를 막기 위해 政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改革에 착수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보다 획기적인 改革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변화, 예컨대 政經總着構造의 청산, 金融實名制 실시 및 土地公概念 확립 등을 일찌감치 포기하는 대신, 枝葉的인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전략을 사용하여 왔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이룩된 몇 가지의 枝葉的인 改善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불평등성의 완전한 청산을 가져오기에 너무나 未洽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政策的 關心이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分配上的 不平等性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중 가장 優先順位가 높은 것으로 꼽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누적되는 國際收支 赤字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한 이래, 分配의 問題는 또 다시 정책입안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부추김을 받아 이제 우리 사회에서 不公平性의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그와 같은 생각이 엄청난 誤解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다. 여러 가지 점에서 평가해볼 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不公正한 分配構造의 확고한 지배하에 놓여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危機 狀況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요점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가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는 단계였다면, 그 이후의 시기는 별다른 개선없이 불평등구조가 온존되어 온 시기였다고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한 분배가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는 계속적으로 擴大一路에 있어 이제는 사회 구석구석까지 속속들이 스며들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效率性의 危機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이 효율성의 위기가 사실은 公平性의 위기에서 초래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극도로 불공정한 분배구조가 계층 사이의 反目과 嫉視를 유발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저축하기보다 一獲千金을 꿈꾸게 하고, 모두가 자기의 偏狹한 利得만 추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不公平性의 解消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根本的 치유책을 쓰기에는 지금 우리 경제의 여건이 너무나도 절박

하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핑계를 과거에도 수없이 보아왔지만 이번만은 종전과 같이 슬그머니 넘어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 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가 너무나도 질기게 얽매어져 있어, 공평성의 문제를 놓아 둔 채 效率性의 問題만을 풀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될 터이기 때문이다. 물론 公平性의 문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평성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시작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천명되지 않고서는 흩어진 분위기를 다시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지금 우리 사회, 경제가 眞正한 危機局面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해야 할 것은 기업활동의 부진이나 국제수지 적자 같은 표면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다. 經濟的 倫理의 墮落으로 인해 경제체제의 效率 그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데에 우리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건실한 윤리적 기반이 있어야만 私利를 公益으로 변환시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기대할 수 있다. 윤리적 기반이 무너지고 만다면, 건전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맹목적으로 자신의 이득만을 탐하는 것과의 차이가 무디어질 수밖에 없으며, 私利의 추구는 調和가 아닌 混亂과 葛藤만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상황을 反轉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회, 경제는 이같이 위 험스런 상황으로 견잡을 수 없이 내달을 것이 분명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不公平한 分配가 순조로운 成長을 阻害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가능성을 두고 하는 말이며, 불행히도 우리 경제는 지금 이 命題가 옳은가의 여부를 검증하는 試驗場이 되고 있다. 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 하고 있는 데 우리의 더 큰 불행이 있다.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副教授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화 : (02)880-6377
팩시 : (02)888-4454

參 考 文 獻

- 權純源(1991) : “國民生活水準의 國際比較”, 『韓國開發研究』 13. 3.
金榮培·尹鳳駿(1991) : 『經濟發展과 適正賃金』, 한국경영자협회부설 노동경제연구원.
서울大學校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1991) : 『轉換期の 韓國社會 : 1990 國民意識 調查研究』.

李斗護 外(1991) : 『貧困論』, 나남.

李性旭(1991) : 『土地問題와 土地公概念』, 國民經濟制度研究院.

李廷雨(1991) : “韓國의 富, 資本利得과 所得不平等”, 서울大學校 經濟研究 創立 30周年記念
심포지움.

李俊求(1989) : 『所得分配의 理論과 現實』, 茶山출판사.

土地公概念研究委員會(1989) : 『土地公概念研究委員會 研究報告書』.

Nozick, R. (1974) :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